

# 부패방지위원회, 건설공사 부조리 완전 차단

불법하도급, 불공정하도급거래 등 하도급 비리 예방대책 구체화



**건** 설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이 가능한 부패 요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올해 중점 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부패방지계획서 수립 및 실천이 각 부처별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방지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전계획~유지관리에 걸친 부패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각 부처에 시달한 부패방지계획 수립제도가 부처별 지침 마련을 통해 본격적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 ■ 정부기관 50억~100억원 이상에 적용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는 부패방지계획 수립의 최저 가이드라인으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부처가 이보다 더 강화된 50억원 이상이나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방위에 따르면 재경부, 문광부 등 사업 발주량이 많지 않은 대부분 중앙기관이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부패방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사업 물량이 많은 행자

부, 교육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교육청, 지자체는 이보다 높은 100억원 이상~500억원 이상 공사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요기관의 물량집행을 대행하는 조달청은 별도의 자체계획 수립 없이 감사원 등 발주공사가 거의 없는 기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적용을 지원하는 기능만 맡게 된다.

건설사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부패방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되 100억원 미만 공사라도 공통 적용되는 부패방지계획을 첨부하는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사실상 대부분 공사에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건교부 참여담당관실 관계자는 “일단 본청과 소속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하되 산하기관은 자체 실정에 따라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대상사업은 계약과 동시에 실무부처가 부패방지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별로 실행하게 되며 집행 사업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 단계별로 부패방지계획 수립

부패방지계획은 대상사업의 최초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후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단계별로 구분되어 수립된다.

계획 수립 및 관리를 맡을 실무부처는 계획에 따라 사업별 중점 관리사항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부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이해관계 조정방안과 사업계획 공개 시기 및 방법을 공정하게 조율하는 한편 일부 사업자에 특혜성 이득을 줄 수 있는 사업계획의 사전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 변칙적인 용지 보상 등을 통한 금품수수 방지대책과 용도지역 변경, 토지형질 변경 등과 관련한 부패예방대책 마련도 이루어진다.

설계단계에서는 특정업체의 자재나 공법 봐주기에 대한 예방책이 강구되고 공사비용 관련 정보유출, 각종 건설심의 위 운영비리, 부실 설계내용 묵인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다.

입찰·계약단계에서는 일단 전자입찰제, 낙찰자 정보공개, 청렴서약제 등의 차질 없는 적용 여부가 중점 감시되며 예정가격 등의 입찰정보 유출, 담합 등 부당 행위 묵인 여부, 부당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계약절차상 부패요인에 대한 방지책 마련 및 실천에 감시역량이 집중된다.

시공·감리단계에서는 공사시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고, 명예공사관리관제 등 민간차원의 감시 활동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또 설계변경과 관련한 비리근절책과 부실시공 묵인대책, 책임감리원의 부당 행위 및 준공검사 등과 관련한 부조리 예방책도 강구된다.

나아가 불법하도급, 불공정하도급거래 등 하도급 비리 예방대책이 구체화되고 시공과정에서의 발주자-시공자간 관계적 항응 및 금품수수비리 근절책도 마련되며 공무원-업체간 불필요한 접촉은 근원적으로 차단된다.

완공 후 유지관리단계에서는 부실한 유지관리 묵인에 대한 대책과 검사과정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외부인사 참여방안이 마련된다.

부방위 정책총괄담당관실 관계자는 “부패방지계획 적용 기준 및 월별실적은 부처 및 기관별로 매달 부방위에 보고되며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을 일단 요구하되 불응시 대통령 주재의 부패관계기관 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진 사례를 보고, 공개하고, 연말 부처·기관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압박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부터 부처별 기준 마련 및 시행대상 사업보고가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대부분 부처 및 기관에서 자체 부패방지계획에 따른 엄격한 건설공사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건설관련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